

# Modi 신정권 출범 이후 인도경제의 변화

(2014. 6. 27)

뉴델리사무소

## 1. 전임정권의 유산 및 신정권의 과제

### □ 전임정권의 유산

- (저성장과 고물가) 국민의회당(INC) 주도의 전임정권은 대외 경제의 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집권기 후반 2년의 성장률이 4%대로 추락하였으며, 물가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('13년 약 10%)에 이르는 불안한 양상을 보임.
- (쌍둥이 적자) 보조금과 무역적자 누적으로 재정 및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현상 지속.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보조금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재정적자/GDP 비율은 5%에 달하고 있으며, 무역적자 증가에 기인한 경상수지 적자는 '12~'13년 회계연도에 GDP의 4.7%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.
- (외환 감소) 외환보유고 수준은 정체하는데 비해 외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. 경상적자가 심화되면서 외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도 지난 '08년 417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하였음.

### □ Modi 신정권의 현안과제

- 전임 정권의 실패에 따른 6대 경제현안(고물가, 일자리부족, 정책 미비, 신뢰위기, 공급애로, 부패)의 해소를 목표로 100일 액션 플랜을 시행 중임.

- 전임정권의 정책실패 원인을 부패 및 신뢰위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 동 관련 근본처방은 부패 척결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인 애로(Bottlenecks) 해소하여 정부의 신뢰회복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봄.

## 2. Modi 신정권의 경제정책

### □ 성장 및 물가안정 동시 추구

- 식료품 가격안정, 생필품 재고 확충, 농산물 직거래 및 신선식품 유통망 개선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노력할 것임.
- 비즈니스 환경개선, 산업-인프라 금융확대, 제조업 육성 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경제성장률 회복을 도모할 계획임.

### □ 금리인하 노력

- '13년 9월 인도중앙은행(RBI)에 취임한 라잔 총재는 물가안정을 위해 3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, 현재 기준금리는 8% 수준임.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와 Modi의 선거공약을 고려할 때, '14년 하반기에 금리인하가 예상됨.
- 다만, 물가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놓고,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 존재.

### □ 조세합리화 및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

- 복잡한 인도의 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, 회사법 상 사회적 책임(CSR) 비용의 경감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.
- 구자라트 성장모델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본받아, 인도 내 경제자산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적극 유치할 계획임. 이를 위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진출 걸림돌인 환경승인, 토지수용,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할 예정.

## □ 인프라 정비 및 제조업 투자 확대

- 기존 인프라 사업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관련 심사 창구를 단일화할 예정이며, 신규 인프라사업으로 갠지스강 유역 정화 프로젝트, 4개 대도시 연결 고속철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계획임.
- 제조업의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서는 “글로벌 제조업 허브”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며, DMIC(델리-뭄바이 산업회랑)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임.

## 3. 신정권 출범 이후 경제 변화상

### □ 투자심리 개선으로 주식시장 활황

- 신정권 출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8개월간 서아시아 3개의 국부펀드가 인도에 5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,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인도 SENSEX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.

### □ 산업생산 증가율 개선 및 소비자물가 안정

- 신정권 출범 이후 산업생산은 3%대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최저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, 지난 '06~'07년 호황기 당시 15%를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- 소비자물가는 지난 5월 8.28%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인도중앙은행이 '15. 1월 목표로 하고 있는 8% 물가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임.

### □ 모디노믹스에 대한 지나친 기대 우려

- 신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한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, 모디노믹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 물가불안, FDI 유입 부진, 은행 부실자산, 몬순 약화에 따른 흉작 등이 모디 신정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된 요인임.